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9/ 7 통권 158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빌리 브란트 vs 아베 신조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증여세 세무조사의 쟁점 10요인과 대응 예시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부동산매매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는 실제사용일·등기일임
- 2022년 세계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무의무 안내
-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적립된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업자의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1인 청년창업실패 예방법 10훈: 원재료, 인건비, 임대료 등 최소시작>

1. 소박하게 시작한다: 착안대국, 착수소국(꿈은 크게 갖되 초기자본 최소화, 1인 출발)
2. 경험 쌓고 창업하라: 기존 직장에 취업해 배우거나, 잘 나가는 제품·용역의 시장구조와 기술추세를 연구
3. 현 직장 퇴근 후 N잡시도: 창업 후 실질소득발생까지는 1년 이상 소요, 퇴근 후 재택 활동 + 배우자와 가족지원 필요
4. 모든 원가 최소화: 매출에 대응되는 원재료, 외주가공비, 임대료, 인건비 · 판관비를 없애거나 최소화
5. 인적용역으로 출발: 제품, 상품, 생산자는 많다, 생산자의 판매·구매 대리, 수출입 대행 등, 인적용역 서비스업으로 출발하면, 재고부담 없으면서 해당 업종의 시장환경, 원재료 기술요건, 핵심쟁점 파악할 수 있고, 소부장 제조업 진출도 가능
6. 내방에 사업자 등록: 온라인과 코로나 시대일수록 아파트 내방을 사무실 삼고 사업자 등록(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없음)
7. 온라인 SNS마케팅: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부 비용지출 없는 마케팅에 주력
8. 내손으로 직접 노동: 시장반응 있고 주문 들어오면 물건 사입, 추가가공, 소분, 포장, 직접배달(직원은 인건비도 문제지만, 창업자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훌쩍 떠나 모방·경쟁자 된다)
9. 창업지원제도 활용: 창업사관학교(사업비의 70% 지원), 창업자금대출(1억원 연 2%) 이익세액감면(5년간 100% 등)
10. 신중한 발전단계: 플랫폼 입점 인적용역제공 → 도 · 소매 진출 → 소부장, 제조, 가공 → 플랫폼 구성 주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87호 / 주간 36호

2022. 9. 7.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1인 청년창업실패 예방법 10훈 : 원재료, 인건비, 임대료 등 최소 시작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중여세 세무조사의 쟁점 10요인과 대응 예시	2
C E O 에 세 이	빌리 브란트 vs 아베 신조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지급이자 토지취득원가반영 여부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부가세신고 문의 - Premium preflight cost - 매출 처리 문의 사항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부동산매매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 는 실제사용일·등기일임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재산세 과세 기준 -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9 10
직 장 인 Survival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2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 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 임 (서면법규부가-3071, 2022.03.11) -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 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소바-5714, 2021.12.30)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회 기재위, 일시적 2주택·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등 중부세 완화법 안 통과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적립된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업자의 소매품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12
세 무 정 보	-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무의무 안내 -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15 16 29 37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28

증여세 세무조사의 쟁점 10요인과 대응 예시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1. 조사근거 : 납세자의 자진신고 완결(법인세, 소득세)이 아니고, 국세청세무조사로 완결대상임.
2. 대상자 : 사업자 뿐 아니라 일반 개인(어린 자녀, 학생, 배우자, 주부, 무직자) 등 전국민 모두가 조사대상
3. 재산 증가와 소득과 지출 간의 차액 시스템(PCI) 적용
재산증가액(property) + 소비지출(consumption) - 신고순소득(income) = 탈루액
4. 세무조사 착수 point : 고가의 부동산, 등기필요재산, 고가의 수입차 등 호화행위시 노출됨.
5. 취득자금조달 원천과 부모의 차입자금 원천 활용 : 실질적 차입인가(실제 자금이전 · 사용, 약정서, 상환과정, 이자지급여부, 원천세 납부 등)
→ 부모의 자금 원천, 재산증가, 매출 · 소득과소신고, 본인과 부모 운영 개인 · 법인사업자의 자금동원 등 세무조사로 비화됨.
6. 취득재산의 기준시가 적용 문제 : 실제 거래액, 객관적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중 높은 가격 적용
7. 과거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 자녀 · 배우자 등 상속인 10년 소급합산, 손자 등 비상속인 5년 합산, 부정행위 · 무신고, 누락신고등이면 15년 소급합산 가능함.
8. 증여공제금액은 적고, 높은 세율 적용의 민감도는 높음 : 10년간 자녀공제(5천만원 → 1억원 이상 예정), 배우자공제 6억원 이의 없고, 10년간 합계 증여 재산, 5억 초과에 30%, 10억 초과시 40%, 30억 초과시 50% 누진율 적용
9. 부담부증여의 활용혜택 : 부담부증여액은 양도세(1세대 1주택은 비과세 가능)로 별도 과세되어, 순증여액 과세와 2개로 구분됨.
10. 본인 사망 10년 내의 증여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상속재산 재계산하므로, 10년계획 수립

빌리 브란트 vs 아베 신조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너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연방정부의 총리요.”

“그것은 안돼. 내가 이미 총리를 지냈기에 그것으로 충분해.”

서독 초대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워와 그의 손자와의 대화로 유명한 내용이다. 2세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독일정치 불문율의 상징이 된 대화다.

비겁한 지역구 세습이 없다. 물론 법으로 2세가 정치 못하게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유능한 정치인들은 가족보다 당, 당보다는 국가를 위하는 정치문화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헌신한다는 정치 철학에 기인하고 있다.

빌리 브란트는 1969년 9월 총리가 된 후 ‘동방정책’을 본격화했다. 1970년 12월 폴란드 · 바르샤바를 방문, 유대인 게토희생자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온 세계가 떠들썩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 사건을 “바르샤바 무릎꿇기(Kniefall von Warschau)”라고 부른다. 젊어서 나치와 조금도 관련이 없던 빌리 브란트는 이듬해 197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통일총리’ 헬무트 콜은 1989년과 1995년 두차례 아우슈비츠 · 바르케나우 강제수용소를 방문해 나치가 벌인 과거사를 사과했다. 동독출신 여자총리 앙겔라 메르켈 역시 2019년 12월 이곳에 현화한 뒤 역사보존을 위해 독일정부가 6000만 유로(약 791억원)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전범국가로서의 사죄를 세계 앞에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때 전범국가였던 일본의 총리들은 독일과 같이 세계인 앞에서 사죄를 하고 있나?

마침 지난 7월8일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가 선거유세중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 아베 신조는 아베 신타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베 집안은 계파정치와 세습출마가 전통인 일본의 대표적 정치집안이다. 메이지유신의 태동기인 조슈번, 현재 혼슈 남단의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아베는 1991년 이곳에서 아버지의 선거구를 승계한 후 내리 당선된 7선의원이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년~1859년)도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조선을 정벌해 북으로 만주를 점령하고”를 외친 일본 근현대사의 사상가, 교육자였다. 또 아베의 롤 모델인 A급전범용의자, 보수반동매파로 일본이 강한 무력을 갖춘 ‘평화헌법’을 처음 주장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외조부였다. 입으로는 ‘적극적 평화’를 외치지만 아베의 피에는 극우의 DNA가 흐르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만류에도 신사를 참배하는 이유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태안보센터의 제프리 호닝교수는 제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2015년 1월14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빌리 브란트 서독총리는 1970년 게토추모비 앞에서 무릎꿇고 전쟁범죄를 사죄했다. 아베도 과감하고 의미있는 언행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안부 소녀상에 헌화하라”고 잇단 비판을 했다.

최장수총리를 누린 아베 신조는 유별나게 경제회복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떠들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살리지 못했다.

한국도 국회의원을 지낸 후 일본의 지역구 2세 세습과 똑같은 짓을 다수가 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고통이다.

지급이자 토지취득원가반영 여부

Q 법인이 분양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였고 토지대금은 2개월 완불하였으나 계획지구라 토지등기는 4년이 지나 등기하였습니다(건물도 1년만에 완공).
차입금은 1년 마다연장하여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최초 토지등기까지는 sh공사토지분양계약서로 대출하였고 토지등기후는 본토지를 근저당하여 차입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금은 있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5년간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반영되는 건지 아님 토지대금완불까지 반영하여야 하는건지 정확한 지급이자에 대한 취득원가 반영을 언제까지 하는게 맞는걸까요?

A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등기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Q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시 기본재산을 구입해야 양도세가 발생안되는지 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양도차익에 대해 일부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일부는 펀드및 채권(국채)구입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1.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 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처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제4조3항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2항)
2. 처분 이후에 발생한 차익으로 펀드 및 부동산구입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부가세신고 문의

- Q**
1. 소프트웨어같은 무형자산 취득한경우 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완료)
 2. 2분기 매출시 현금영수증발급을 누락하였는데, 1기확정신고시 건별로 부가세신고 반영하고 3분기에 현금영수증발급, 2기에정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매출 미반영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1. 무형자산도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므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현금매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건별로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3분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1기 확정신고시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2기에정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하면 해당 사실을 알려주면됩니다.

Premium preflight cost - 매출 처리 문의 사항

- Q**
1. Premium preflight cost 중 일부를 고객사가 지급해주시기로 협의 하였고 이것이 6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포함 되어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 신고를 하면 될지 또는 운송비로 인식하여 수입금액제외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문 회계 처리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출처리를 해야 할지 운송비 차감 처리를 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A**
1. 귀사가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이 지급해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사례금이므로 매출로 볼수 없다고 판단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일종의 사례금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는 실제사용일·등기일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동일 장소에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다른 일반재산처럼 인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또한 커서 계약시점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현행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다른 일반재산에 비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일과 양도일은 그 시점선택에 따라 양도소득귀속연도의 차이, 적용세율차이, 합산되는 소득금액과 다단계누진세율차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등 많은 면에서 세액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며,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특수한 거래에서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① 미완성·미확정된 자산

건설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② 교환하는 경우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 취득·양도일이 되며,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된다.

③ 토지수용 및 공탁의 경우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 협의 성립하거나,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보상금수령전 소유권이전 등기시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양도일이며,
-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중인 경우는 소유권이전일과 변동보상금 확정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양도일이 된다.

④ 가등기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는 본등기한 날이 그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된다.

⑤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초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⑥ 환지처분시 양도일과 취득일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다.

하지만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을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⑦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재산세 과세 기준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산출세액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 적용

과세대상	세율
주택	0.1%~0.4% (4단계 누진세율)
건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토지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선박 및 항공기	0.3% (고급선박 5%)



예술품 과세표

구분	필요 경비율
서화·골동품 양도가액 1억원 이하	90%
서화·골동품 양도가액 1억원 초과	90% 80%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90%)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대표발의자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제안일자	2022년 8월 18일
제안이유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결정 비판 해소
과세대상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과세요건	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5억원 이상 초과 소득 발생
과세방식	초과소득에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확인 사항

구분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자격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400만원 (고소득자는 최대 300만원)	연간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중도·부분 인출 가능 여부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
위험자산 투자 한도	한도 없음	최대 70%

※ 고소득자 :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경우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2

9. 일일목표경영을 생활화하라

오늘 하루 해야할 일들을 적어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루하루를 경영하라.
일일 경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삶의 큰 핵심이다.

10. 지식경영을 생활화하라

아는 것이 곧 힘이다. 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11. 시간경영을 생활화하라

비즈니스의 기본은 시간관리다.

시간관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루, 이틀이 아닌 평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12. 사소한 것에서 충성하라

13. 배우고 고치라

14. 주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준비하라

10년 앞을 대비한다. 환경 분석과 내 목표를 총체적을 점검하고 준비하라

15. 고객감동을 생활화하라

비즈니스는 고객중심의 사고다. 항상 고객을 감동시킬 무기를 발굴하라.

16. 기회를 포착해서 도전하라

매일매일 삶에서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다.

17. 스스로 책임지라

내가 만들지 않는 인생은 없다. 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든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적립된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업자의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071, 2022.03.11

질 의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로 재화 용역을 구매시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오피포인트'(이하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있음
- 고객은 적립된 포인트를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용역 구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된 포인트는 사용시점에 질의법인과 제휴가맹점이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 정산하게 되나
 - 질의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 정산 없이 질의법인이 비용을 전부 부담함

질의

-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재화 용역을 구매시(1차 거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 '17.4.1. 이후 고객이 신용카드업자의 포인트몰에서 재화 구매시(2차 거래)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 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22.3.4.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제6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사전법령법인-1634, 2021.12.30

질 의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 유상증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무상감자 전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이하 '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시 A법인과 C법인이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에 A법인 및 C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소비-5714, 2021.12.30

■ 질 의

- ○○지역주택조합은 ○○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각 조합원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함

질의

-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법규법인-5, 2022.01.19

■ 질 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회 기재위, 일시적 2주택·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등 종부세 완화법안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특별공제 금액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오늘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별공제액 기준선을 공시가 14억 원으로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과도하게 낮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별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설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종교단체 종중,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신청 '내달 16일부터'

종교단체나 종중 등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자는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특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 대해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6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3~6%의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0.6%~6% 일반 세율이 적용돼 보유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해도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의 1.5배~3배를 초과하는 종부세는 내지 않는다.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46만명에 안내...15일까지 신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도 정기신청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역시 재산 계산 시 포함한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버서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메시지 또는 ARS(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2022. 8

□ 정부는 지난 7.21일(목)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7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2~8.1일) 및 입법예고(7.22~8.8일)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음.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7개 법률안들은 9.2.(금)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 국세청, 2022. 8

- (발간배경)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구성내용)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① 사실관계 ② 질의내용 ③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참고자료 순으로
 - ▶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 ▶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발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요 구성내용

-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민들이 양도소득세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② 다주택자 중과제도 ③ 조합원입주권·분양권 ④ 장기임대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하며,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 구성은 ①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질의내용 ③ 국세청의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비과세 판정흐름도 등 참고자료 순으로 하여
 -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흐름도를 추가하고
 - ▶ 안내한 사례와 동일·유사한 상황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함께 수록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3 이용방법

-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의 별도 코너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며, 접근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향후계획

-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 ▶ 지난해 주택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주택과 세금(’21년 3월)」 책자를 발간하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21년 6월)」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 올해에도 이러한 납세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 ▶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 책자는 개정세법을 반영하는 등 더욱 알차고 새롭게 구성하여 「2022 주택과 세금」으로 3월 중 다시 발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 ◎ 박국세씨는 '20.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 박국세씨는 '22.5월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22.6월 양도함

Q. 제 경우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였을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해석사례 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2021.10.01.)

-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0.08.12.)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2007.07.09.)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은?

무주택자인 이대한씨는 '22.8월 B주택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청함

Q. 주택을 취득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B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향후 B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 거짓계약서(다운·업 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참조

거짓계약서(다운·업 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①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 :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



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 신고가산세 : 무(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납부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기간

③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해석사례 법규과-410 (2012.04.20.)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강성실씨는 '21.7월 A주택을 상속받음

- 강성실씨는 '22.12월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12.1월 당초 취득가액(아버지) : 2억원	'21.7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 8억원
---------------------------	---------------------------

* A주택(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인 8억원을 시가로 가정

Q.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인 8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006.01.18.)

-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2005. 8. 5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6-부동산-5892(2016.12.30.)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주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권민음씨는 A주택을 '22.7월 15억원에 양도함

-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없음

양도당시 기준시가 : 10억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 2억원
------------------	-----------------

Q. 취득한 지 20년이 지난 A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요?

A. 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 ③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아래와 같이 환산취득가액은 3억원입니다.

〈환산취득가액〉

$$\frac{\text{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5억원)}}{\text{양도당시 기준시가(10억원)}} \times \frac{\text{취득당시 기준시가(2억원)}}{\text{양도당시 기준시가(10억원)}} = 3\text{억원}$$

**해석사례 1. 서면-2016-부동산-5892(2016.12.30.)**

-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② 위 1에서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주식등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납세과-403(2014.06.09.)

- 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 ② 위 1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양도비 제3항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5**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최민국씨는 '14.1월 취득한 A주택을 '22.8월 양도할 예정임

Q. A주택을 취득하면서 오래된 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를 교체하였습니다.

- A주택 양도시 이러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양도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나,
- 씽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비교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비교〉

구 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개념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	×
사례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벽지, 장판 교체비용, 씽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6092(2017.08.14.)

-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이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② 귀 질의의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위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장세정씨는 '15.4월 취득한 A주택을 '22.6월 양도함

Q. A주택 취득·양도 과정에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A주택 양도시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은 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563(2011.07.05.)**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2007.02.27.)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별도의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7**주택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김만세씨는 '14.2월 A주택 취득시 금융권 대출을 받았음

- 김만세씨는 '22.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제 경우 주택 취득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관련 이자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이자비용은 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706(2010.05.18.)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06.01.06.)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8 주택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김대한씨는 임대 중인 주택을 '22.5월 매수인 실거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김대한씨는 장기간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함

Q. 제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도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퇴거합의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해석사례 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2021.06.16.)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2020.06.18.)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7-부동산-1711(2017.12.06.)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9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김으뜸씨가 '20.1월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A주택이 '22.6월 완공됨

- 김으뜸씨는 향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던데,

- A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A.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더 빠르므로 A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22.7월)입니다.

* 자가건설, 상속·증여 등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 페이지 참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소득법§98 및 소득령§162)》

구 분	내 용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상속 또는 증여 취득한 경우	· 상속 : 상속개시일, 증여 : 증여받은 날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동일

해석사례. 서면-2017-부동산-1357(2017.11.22.)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0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윤민음씨는 '22.6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A주택 소유권을 취득함.

- 윤민음씨는 '22.10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Q.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고 하던데
- 배우자 의로 소유하던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 ..의로 변경된 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기는 ' 16.8월이므로 귀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2년 이상 보유*) 합니다.

* '17년 8·2 대책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요건 없음

해석사례 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2015.07.20.)

-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재산세과-4022(2008.12.01.)**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3. 부동산거래관리과-579(2010.04.1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26일(금)	8월 29일(월)	8월 30일(화)	8월 31일(수)	9월 1일(목)
미 달 러 (USD)	1336.90	1322.50	1347.70	1347.50	1345.10
일 본 엔 (JPY)	978.95	965.89	971.35	970.65	966.34
영 국 파 운 드 (GBP)	1581.69	1560.22	1577.62	1570.65	1561.12
캐 나 다 달 러 (CAD)	1033.59	1020.84	1035.82	1029.49	1023.55
홍 콩 달 러 (HKD)	170.38	169.82	171.74	171.68	171.38
위 안 화 (CNH)	194.73	194.20	194.85	194.84	194.61
유 로 화 (EUR)	1333.02	1325.30	1347.43	1350.26	1351.69
호 주 달 러 (AUD)	931.95	916.23	929.24	924.12	919.51
싱 가 폴 달 러 (SGD)	962.35	954.21	965.71	963.84	962.6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8.95	298.27	300.16	301.08	300.55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무의무 안내

- 국세청, 2022. 8

1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안내

- IT기술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각광 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일명 ‘유튜버’ 등), SNS마켓, 공유숙박 등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함에 따라 '19.9월 부터 업종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자등록 안 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업종코드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주요 온라인 신종업종 유형 및 정의

유튜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버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틱톡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토크쇼,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사업자, 인적시설과 물적 시설이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 입니다.
SNS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의무는?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유튜버*, 과세사업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 면세사업자)	SNS마켓	공유숙박
업종코드	921505	940306	525104	551007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사업자,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 사업자등록 제출 서류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 ① 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 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②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 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은?

-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함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3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신고와 납부방법은?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 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납부(환급)세액 계산방법은?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세액} (\text{매출액} \times \text{세율}(10\%, 0\%)) - \text{매입세액}$$

*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 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부가가치율} \times \text{세율}(10\%, 0\%) - (\text{공급대가} \times 0.5\%)$$

업 종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4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신고와 납부방법은?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은?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산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공유숙박(숙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 기장의무 판단 상세 정보: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세액계산 방법은?

-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begin{aligned} \text{·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end{aligned}$$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text{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 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5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 미국 Google사는 '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 세액 명세서(부표2)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 (A) × (B / C)

A: 소득세법 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B: 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 ①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

*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②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 \text{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text{전체비용} \times \left(\frac{\text{국외원천 매출}}{\text{전체 매출}} \right)$$

●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 시 유의사항은?

- 종합소득세 등 신고기간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원천징수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비중, 소득세 산출세액에 따라 한도계산을 해서 한도가 넘으면 이월하여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결손사업자의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월하여 향후 10년간 세액 공제 가능하며, 신청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 등 관련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월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6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 업종과 사업자현황 신고는?

- (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 (신고)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는?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사업자 인적사항, ②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 상세 정보: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신고안내 > 사업장 현황신고

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 발급 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은?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 21.1.1. 이후부터 적용, 공유숙박 사업자는 ' 23.1.1. 이후 적용 예정
 -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126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상세 정보: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8 자주 묻는 질문(FAQ)

유투버

Q.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슈퍼챗으로 받은 외환도 매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에는 기본광고수익,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멤버십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 전부를 신고하면 됩니다.

- 그 외 개별 후원계좌 등을 통해 수취한 후원금,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광고료 등도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구글로부터 원천징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한도계산을 하여야 하며 한도 초과 시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 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SNS마켓

Q. 중고제품 판매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단순 1회 물건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SNS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A.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SNS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에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 수령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 21.1.1.부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적용

공유숙박

Q.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과 도시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입니다.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 국세청, 2022.8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 26.(금) 지급했습니다.

□ (지급규모) 이번에 지급한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 신청)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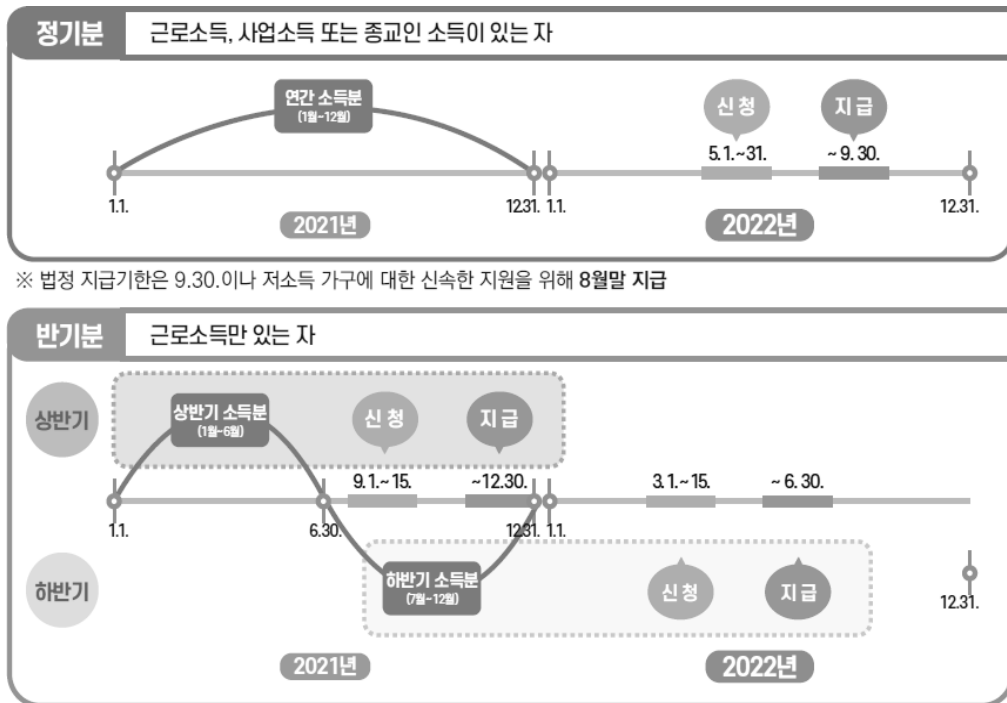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 지급 일정

-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 심사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내일(8월 26일) 일괄 지급했습니다.
 -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¹⁾ 또는 소득요건²⁾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홀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정기분과 반기분의 업무흐름도 |



● 지급 규모

- ('21년 귀속 정기분)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하였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합니다.

(만 가구, 억 원)

귀속	구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1년	정 기 분	291	28,604	249	24,994	42	3,610
'20년	합 계	468	40,666	399	34,739	69	5,927
	정 기 분	336	32,517	267	26,590	69	5,927
	반기정산분	132	8,149	132	8,149	-	-
차이		△177	△12,062	△150	△9,745	△27	△2,317

- ('21년 귀속 전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을 포함하면 총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 '20년 귀속분 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2조 256억 원(상반기분 4,421억 원 + 하반기·정산분 1조 5,835억 원)

(만 가구, 억 원)

귀속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1년	489	48,860	433	44,032	56	4,828
'20년	487	49,845	418	43,918	69	5,927
증감	2	△985	15	114	△13	△1,099

● 가구당 평균 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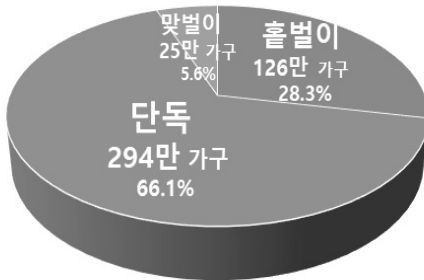
구분		'21년 귀속	'20년 귀속
평균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110	114
	근로장려금	102	104
	자녀장려금	86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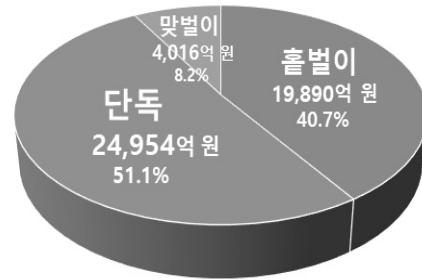
2 유형별 지급 현황

- (가구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홀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입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조 4,954억 원(51.1%), 홀벌이 가구 1조 9,890억 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 원(8.2%) 순입니다.

| 지급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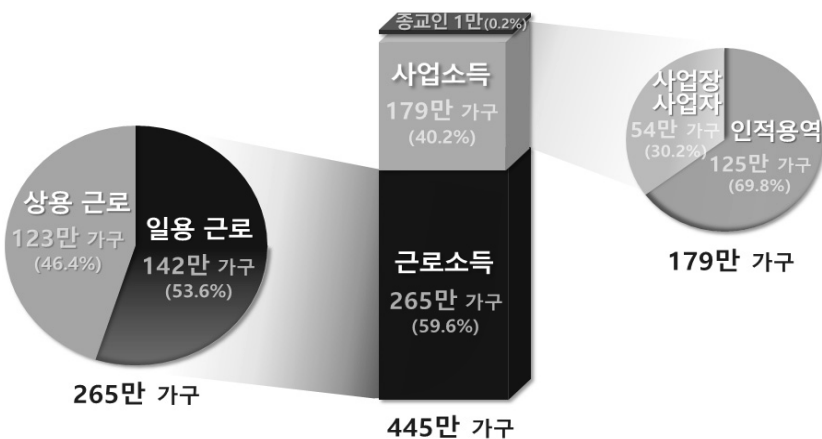


| 지급 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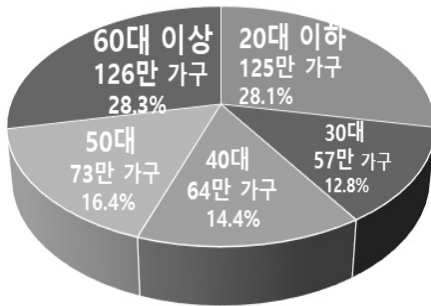
- (소득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입니다.

| 지급 가구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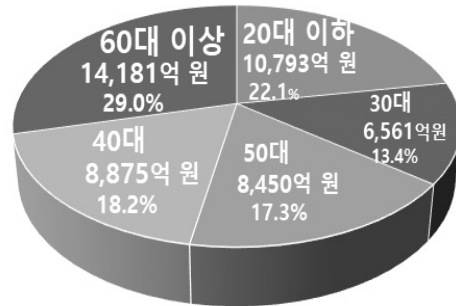


-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1조 4,181억 원), 20대 이하(1조 793억 원), 40대(8,875억 원), 50대(8,450억 원), 30대(6,561억 원) 순입니다.

| 지급 가구 |



| 지급 금액 |



3 '22년도 세법 개정(안)

- '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 |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 - 165	260 - 285	300 - 330	70 ÷ 80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 2.4억 원 미만			



II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1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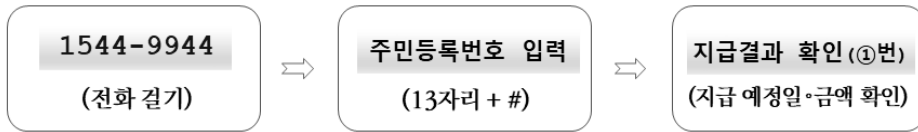
-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합니다.
 -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적용
 -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 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장려금 수령 방법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2)할 수 있습니다.
 - 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 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발신 번호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에만 확인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4 기한 후 신청

-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9.1. ~ 9.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이용 불가
-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 1 -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통계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평균지급액	가구	금액	평균지급액	가구	금액	평균지급액
489	48,860	110만 원	433	44,032	102만 원	56	4,828	86만 원

●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 구	445	294	126	25
금 액	48,860	24,954	19,890	4,016

● 소득 종류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근로소득1)	사업소득2)	종교인소득
가 구	445	265	179	1
금 액	48,860	28,040	20,552	268

1) 근로유형별 지급 현황(근로소득자)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가 구	265	142	123
금 액	28,040	14,890	13,150

2) 사업유형별 지급 현황(사업소득자)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인적용역사업자	사업장 사업자
가 구	179	125	54
금 액	20,552	13,549	7,003

● 연령대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가 구	100.0	28.1	12.8	14.4	16.4	28.3
	445	125	57	64	73	126
금 액	100.0	22.1	13.4	18.2	17.3	29.0
	48,860	10,793	6,561	8,875	8,450	14,181

참고 2 - 근로·자녀장려금 미담 사례

<사례 #1> 우직하기만한 나의 목표를 이뤄준 장려금(20대 청년 정OO)

아버지의 실직으로 취업 준비(정규직)를 포기하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다가 근로장려금 덕분에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목표가 생겼음. 힘들 때마다 지급 받은 근로장려금을 통해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고 우직하게 노력한 결과 공기업에 취업함.

<사례 #2> 또 다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40대 자영업 이OO)

남편과 사별 후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반 이상 줄어 3개월 치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매마침 지급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었음. 미용실 운영만으로 생활이 힘들어 국비지원으로 취득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을 떠올리며, 나라로부터 받은 지원과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음.

<사례 #3>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을 이끌어준 지팡이(40대 탈북자 주부 김OO)

5년전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주민임. 지급 받은 근로장려금으로 중국에서 딸을 데려올 수 있었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음. 장려금은 대한민국에서 적응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음.

**<사례 #4> 넉넉지 못한 다둥이 가정의 복권(50대 다둥이 아빠 문OO)**

부부가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네 자녀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는데, 지금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아이들과 함께 못하던 외식도 하고 선물도 할 수 있었음. 우리가 받은 도움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며, 성장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음.

<사례 #5> 사막의 오아시스! 자녀장려금!(30대 한부모 가장 김OO)

고등학교 재학 중 미혼인 상태로 임신과 출산을 하였고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키우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한부모 가장임. 중졸 학력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택배, 주방보조 등 비정규직 소득으로 세 가족이 근근이 생활하고 있음. 지금 받은 자녀장려금으로 중학생 딸이 그렇게 바라던 1인용 책상과 의자를 선물해 줄 수 있었음.

참고 3 -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사례 1****증빙서류 허위 제출****<#1> 무상임대차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 ◇ (신청) 김OO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함
- ▷ (심사) 임대인에게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내용과 상이하고, 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 (결과)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 ◇ (신청) 민OO씨는 △△유통으로부터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유통 대표에게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사 대표는 민OO씨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
 - ▷ (결과)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사례 2 | 잘못 계산하여 신청

<#1>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 ◇ (신청) 이○○씨는 사업자 등록없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중개업체로부터 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 소득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심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금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 제외

<#2>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

- ◇ (신청)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강○○씨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심사)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

참고 4 - 장려금 제도 효과('21년 장려금 설문조사 결과)

● 가계소득 기여도

- 응답자의 93.4%가 장려금이 가계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효과 있음	보통임	효과 없음	잘 모르겠음
93.4%	4.7%	0.9%	1.0%

● 근로유인 효과

- 응답자의 92.4%가 근로장려금이 구직 또는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근로유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

효과 있음	보통임	효과 없음	잘 모르겠음
92.4%	5.2%	1.0%	1.4%

● 양육비 지원 효과

- 응답자의 93.7%가 자녀장려금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

효과 있음	보통임	효과 없음	잘 모르겠음
93.7%	4.6%	1.3%	0.4%



참고 5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4,000만 원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50 ~ 7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회원권·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 우 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